

<b>↑ 코스피</b> 2742.00 (+35.03)	<b>↑ 코스닥</b> 882.90 (+2.94)
<b>↓ 금리</b> (미국 9년) 3.338 (-0.003)	<b>↓ 환율</b> (원·달러) 1347.10 (-1.80)

m-커버스토리  
호텔 '어메니티'  
무상제공 금지  
03



이재명·한동훈 지원 유세 집중



/뉴스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울산 남구 IBK기업은행 울산지점 앞에서 전은수 남구갑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미관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수원살리기' 집중유세에서 김현준 수원갑, 홍윤오 수원을, 방문규 수원병, 이수정 수원정, 박재순 수원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4·6·8면>

##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소득 기준 1.3억→2억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尹,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 관련 법률개정 상반기 최대한 완료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 계획 올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 즉시 집행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폰 지원금 확대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역시 부부 합산 기준 3800만원에서 개인소득 기준인 2200만원의 두 배인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8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금투세 전면 폐지” vs “부자 감세 안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여야, 자본시장 공약 대립각 금투세·비트코인 현물 ETF 등 소액 투자자 표심 확보경쟁 치열

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간 자본시장 관련 공약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바라는 건 같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액 투자자들의 표심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과생상품 등 금융투자자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투자자에게 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가 부과

돼 세율이 더 높아진다. 금투세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여야가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방법론'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전면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을 외치고 있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2월 2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자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측은 금투세를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는 입장이다. 금투세가 시

행되면 최소 20% 이상의 세금이 부과돼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이 심화하거나 증시 매도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투자자들의 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하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다.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투자

자가 적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나 마찬가지로 논란을 내세우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는 기존 여야 합의대로 금투세가 2025년 1월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치가 담겼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매년 1조3443억원이 감지지만, 폐지될 시에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청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공약을 다루는 모습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법인투자 내용 등과 관련한 공약은 다루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거래를 허용하는 공약을 내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편법 대출’ 양문석에 대출금 11억 전액 회수 통보

### 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반 허위 증빙 등 위법·부당행의 발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에 대한 공동검사 중간 결과, 허위증빙 제출 등 위법·부당행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금융감독원 공동검사반(이하 검사반)은 4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 후보 딸의 대구 수

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중간 브리핑에 나섰다.

검사반에 따르면 2020년 11월께 양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OO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31억2500만원이었다. 검사반은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자의 딸 B씨는 부모의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 어머니 A씨의 계좌로 보냈다. 대출이자도 A씨가 대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반은 이 건을 두고 대출의 용도와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딸

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서(5개 업체, 7건)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났다. 이 외에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만 심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양 후보의 딸이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조국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국가 만들겠다" /사진 뉴스시스
- ▲ 한-유엔난민기구, 인태 지역 난민 문제 협력대응 강화

- ▲ 국민의힘 서울 후보들, '강변북로·올림픽대로·경의중앙선 지하화' 공약
- ▲ 정부, 올해 지방시대 정책에 42조원 투입...시행계획의 결



- ▲ 한 총리, 늘봄학교 일일강사로... "전담 행정 인력 배치" /사진 뉴스시스
- ▲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인권위 "성전환자 인권 일보전진"